

요약

‘서울 안전’ 인식, 사회계층적 특성별 차이 위험지역 분포는 취약계층 분포와 상관성

서울은 시설 노후·대형화, 안전취약인구 늘어 ‘위험요인 증가’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정보화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성 변화가 도시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 서울은 각종 도시시설과 활동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비탈면, 지하공간 등이 개발됨으로써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이 상존한다. 서울시에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주요 재난·재해를 살펴보면 침수, 산사태,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사고 등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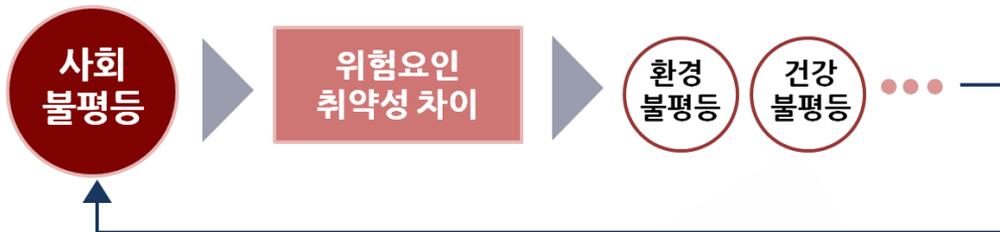
서울의 도시공간은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와 함께 노후화가 현격히 진행되고 있다. 50년 넘는 노후 시설의 다수(교량 27%, 터널 30%, 옹벽 37%, 승강장 17%)가 보여주듯이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 외국인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층의 증가 및 계층 양극화의 심화가 현저하다. 이는 안전취약인구가 늘어나며, 생활안전의 불안요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위험요소 불평등한 분배로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복지 필수

위험사회는 위험요소의 불평등한 분배를 보여주고 있다. 위험 인식이 사회적 위험지위를 결정하고, 그 위험지위가 정치적 과정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취약계층은 경제적·사회적·인구학적 조건의 취약성에 따라 위험에 불평등하게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위험환경의 등장에도 취약계층은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 때문에 위험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가 미흡한 데서 비롯되었고, 위험상황으로 인해 계층 하락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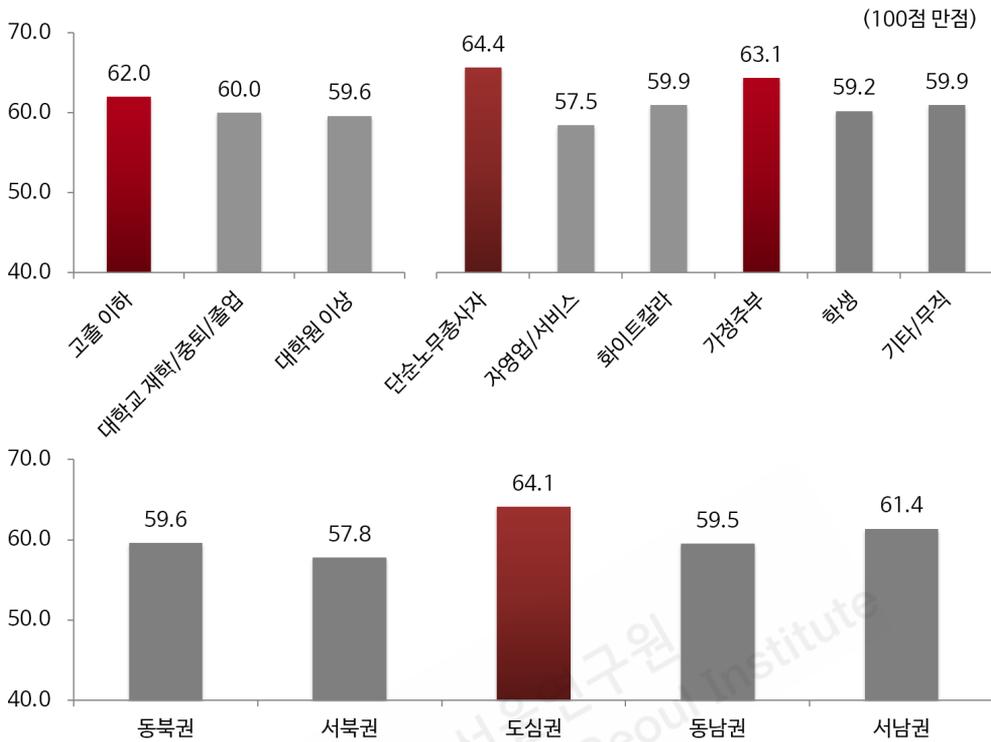


[그림 1] 위험의 불평등

남성보다 여성, 단독·아파트보다 원룸주민이 더 “서울 불안”

2014년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조권중, 2014)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60.9점)이 서울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63.5점)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보다 서울의 위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종사자(62.3점)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62.5점)이 서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과 정보에 민감한 집단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은 특성이 있다.

2017년 설문조사(신상영 외, 2017)에서는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에서 집단별로 단순노무종사자(64.4점)가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57.4점)는 가장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64.1점) 거주자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취약한 계층들의 위험도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신상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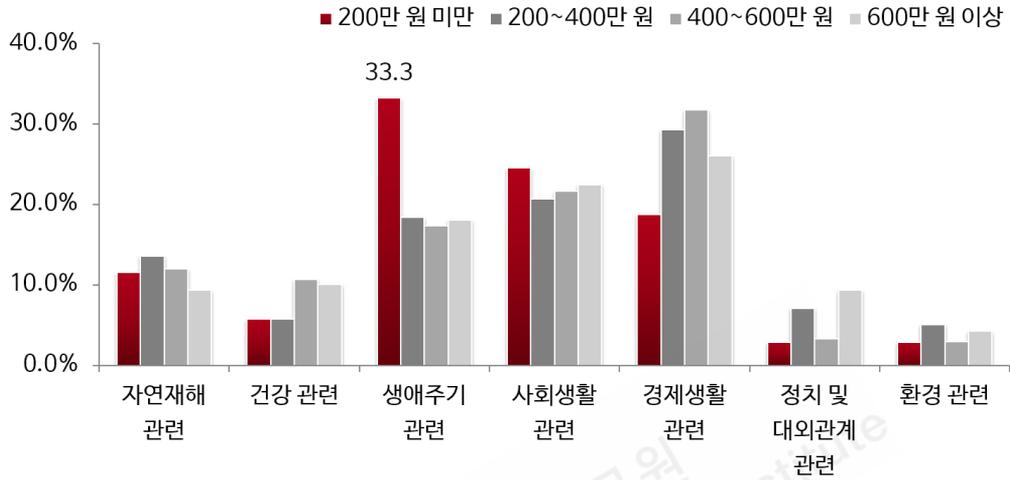
[그림 2] 사회경제적 특성별 서울의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도 인식

30대는 경제생활,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위험 가장 취약 인식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응답비율은 30대(35.5%), 사회생활 관련 위험 응답비율은 20대(27.7%), 생애주기 관련 위험 응답비율은 60대 이상(25.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직업군은 화이트칼라(33.1%)와 블루칼라(31.3%)이다. 그 외에 블루칼라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28.1%), 화이트칼라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27.6%)이 취약하다고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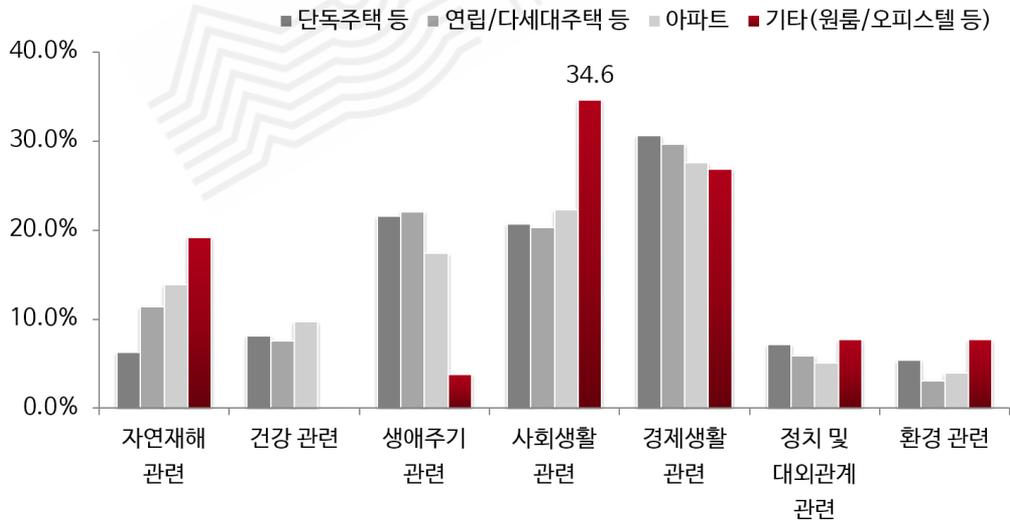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는 오히려 생애주기 관련 위험(33.3%), 사회생활 관련 위험(24.6%)이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의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

고 보는 비율(34.6%)이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에 비해 특히 높다.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남지역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서북권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조권중, 2014).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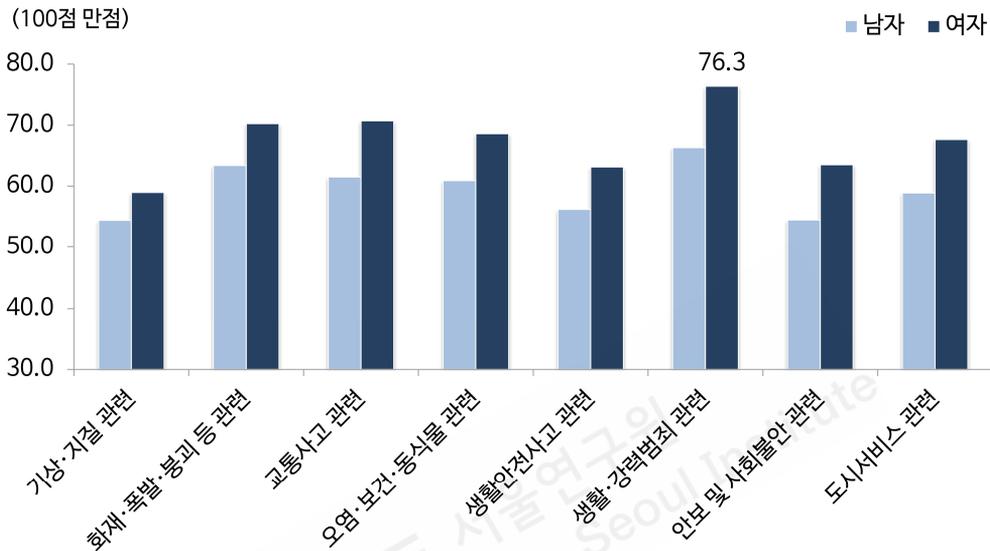
[그림 3] 가구소득별 서울시 가장 취약한 위험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4] 주택유형별 서울시 가장 취약한 위험

2017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재난·사고 중 생활·강력범죄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은 생활·강력범죄 관련 위험(76.3점)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모든 재난·사고의 발생빈도와 피해정도에 민감하다. 학생과 가정주부, 20~30대 젊은 집단,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은 모든 차원의 재난·사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다.



자료: 신상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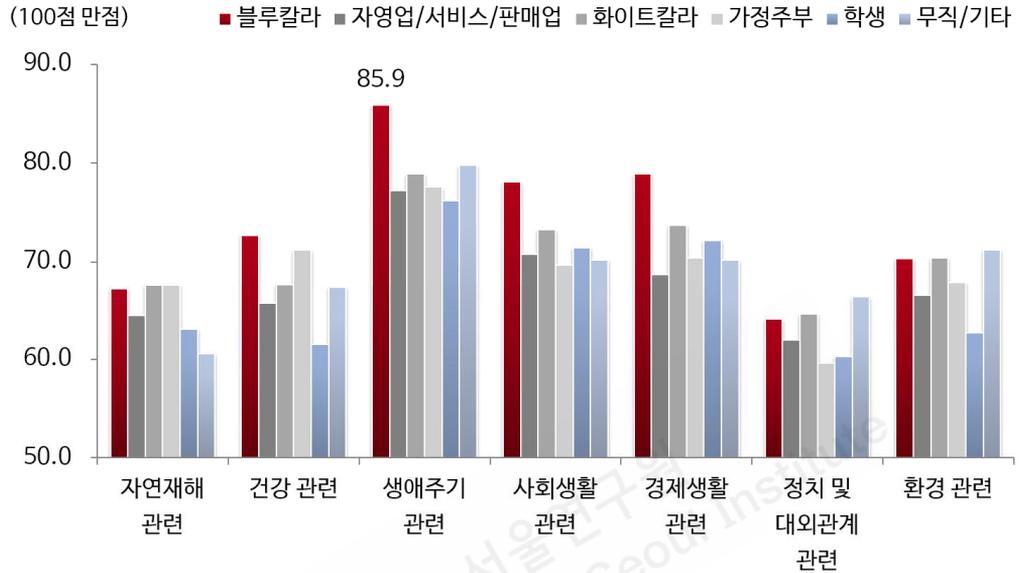
[그림 5] 성별에 따른 재난·사고 차원별 위험도 인식

서울 시민들, 실업·빈곤 등 경제생활, 노후 생계문제에 더 민감

시민들은 실업, 빈곤 등의 경제생활이나 노후의 생계문제 등에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2014년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68.6점), 생애주기 관련 위험(68.1점)이 본인에게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생활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60대 이상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 블루칼라 직업군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보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2014년 조사에서 향후 가장 증가할 위험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78.3점)을 택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 직업군은 생애주기 관련 위험(85.9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나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향후 증가한다는 인식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는 다른 계층과 달리 사회생활 관련 위험(83.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안전이 취약할수록 사생활 침해, 폭력범죄, 인적 재난 등의 위험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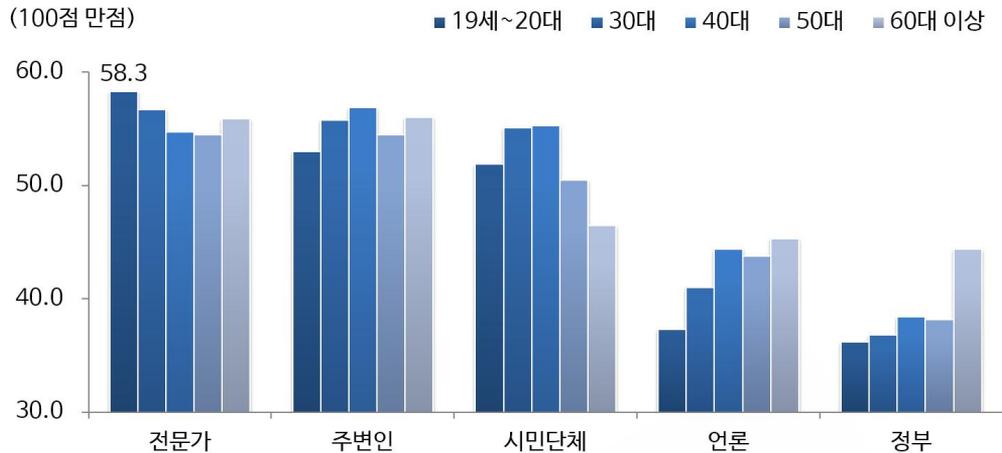
[그림 6] 직업에 따른 위험분야별 향후 증감전망

위험 관련 지식, 60대 이상은 TV, 20·30대는 인터넷 이용해 획득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관련 지식을 TV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60대 이상(93.4%)에서, SNS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20대(76.4%)와 30대(7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민들은 매체를 통해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70.4점)를 접했을 때 두려움이 가장 컸다.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정보로 인한 두려움은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75.0점)와 기타 주택유형 거주자(78.9점)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나 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전문가(56.0점), 주변인(55.3점), 시민단체(51.9점)가 높은 반면, 정부(38.8점)나 언론(42.4점)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20대(58.3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44.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북권에서는 시민단체(59.3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조권중,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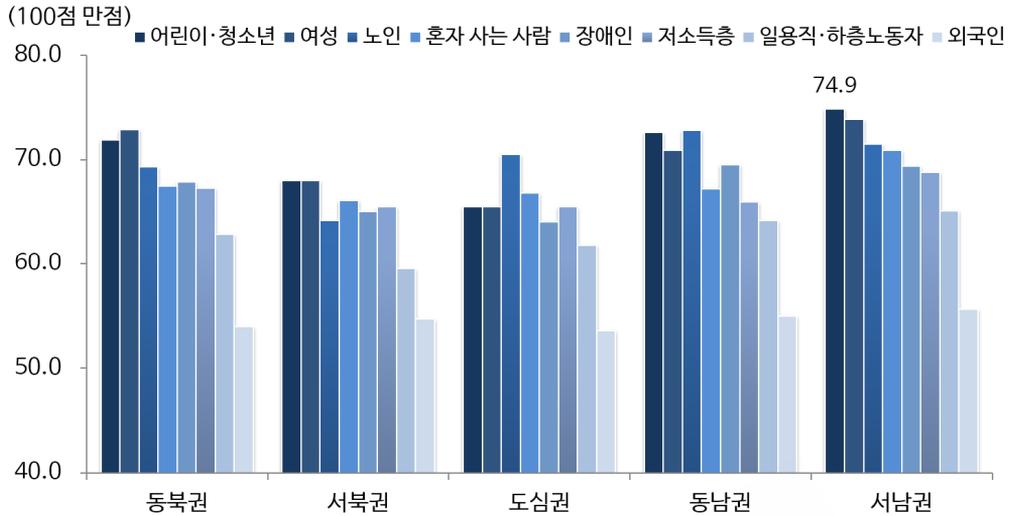
자료: 조권중, 2014

[그림 7] 연령대에 따른 안전 관련 정보 출처별 신뢰도

동북권은 여성, 도심권은 노인, 서남권은 어린이·청소년 가장 위험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취약계층의 위험을 높이 인식(67.0점)하고 있으며, 그 중 어린이·청소년(72.2점)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여성(71.8점), 노인(70.2점), 혼자 사는 사람(68.3점)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은 여성(72.9점), 도심권은 노인(70.5점), 서남권은 어린이·청소년(74.9점)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남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서북권은 주요 취약계층의 위험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자료: 신상영 외, 2017

[그림 8] 권역별 취약 인구집단 위험도 인식

중구 등 도심권은 화재·범죄·안전사고, 성북구는 자연재해에 취약

2016년 발표한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에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교통, 자연재해 부문이 1등급, 화재 부문은 2등급, 자살, 감염병 부문은 3등급, 안전사고 부문은 4등급, 범죄 부문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등급이 하락했다.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이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지수가 낮고, 성북구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국민안전처, 2016.12).

2016년 서울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10개 지역으로 2010년 2개 지역에서 늘어났다. 서초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4개 지역을, 강서구는 3개 지역을, 중랑구도 3개 지역을 지정했다(하천관리과·산지방재과, 2016).

서울의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주로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강남구(8,512건)에서 가장 많고, 영등포구,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도 비교적 많이 발생한다(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2015).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동남권은 화재사고 취약지역이다. 2015년 화재 사고 발생 건수는 강남구가 504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금천구가 131건으로 가장 적다. 그 외 강서구, 관악구, 종로구 등도 화재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 2015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3,970건)를 비롯한 송파구, 서초구 등 오피스 밀집지역이다. 서울의 119 출동 건수는 강남구가 2015년 기준 9,389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서구, 그리고 노원구도 6,000건 이상 발생했다(서울통계, 2015).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강북구(30.6명), 동대문구(28.4명)가 비교적 높은 반면, 서초구(15.2명)가 가장 낮다(통계청, 2015).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감염병 해외 유입은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최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적다(생활보건과, 2015).

어린이·청소년은 송파·강남구, 노인은 강북·종로·중구에 많이 거주

서울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송파구(119,209명)와 강남구(104,806명)에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 송파구(337,861명), 강서구(301,127명), 강남구(300,070명)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구별 여성의 비율은 강남구(52.1%), 서초구(51.9%), 송파구(51.2%) 등 동남권 지역에서 높았다.

자치구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도심권을 비롯하여 강북 지역이 높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강북구(15.7%), 종로구(15.2%), 중구(15.1%)가 높은 반면, 송파구(10.2%), 강남구(10.4%), 서초구(10.9%)는 낮다.

서울의 1인가구는 2015년 29.5%로, 3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족’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중 51.2%가 여성이다. 1인가구는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와 대학가, 도심권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비율은 관악구가 43.9%로 특히 높다. 그 외 중구,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지역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을 살펴본 결과, 노원구(4.3%), 강북구(4.1%)는 높은 반면, 서초구(1.0%), 송파구(1.4%)는 매우 낮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순이다. 주택보급률은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9개 자치구에서 100%가 넘는 반면,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은 89.1%로 가장 낮았다.

